

윤여원, 이승화 이사 선임안 반대

〈콜마비엔에이치 대표〉

“무리한 이사회 진입, 심각한 위협”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

윤 대표, 회사·주주 가치 훼손 강조
콜마비엔에이치 임시주총 소집 부결
“오너가 갈등, 이사회 의결 영향”

오는 26일까지 열릴 것으로 예정된 콜마비엔에이치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치 대표가 경영권 방어에 적극 나섰다.

이번 콜마비엔에이치 임시 주총은 윤여원 대표의 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의 요구로 개최되는 것으로 윤 대표와 윤 부회장은 각각 ‘독립 경영’과 ‘경영 쇄신’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1일 콜마그룹에 따르면, 윤여원 대표는 지난 8월 29일 콜마홀딩스에 ‘이승화 전(前)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엔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반대하는 공식 공문을 제출했다.

윤여원 대표는 이 공문을 통해 “이승화 후보자는 과거 CJ제일제당 재직 당시 해외 자회사 바타비아의 경영 부실과 관련하여 인수 시작 및 이후 운영 등 전반적인 경영실태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서면경고를 받은 뒤 퇴직한 이력이 확인됐다”며 “이와 같은 경력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자격과 적격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치 대표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승화 전(前) CJ제일제당 부사장은 2021년 CJ제일제당이 인수한 바타비아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 손실을 발생시켜 CJ그룹 수익성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승화 전(前) CJ제일제당 부사장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직접 추천한 인사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은 콜마그룹 핵심 경영진으로서 지난 4월부터 그룹 내 계열사 콜마비엔에이치에 경영체계 재정비를 요구해 왔다. 특히 윤상현 부회장 본인과 이승화 전(前)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엔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공문 제출은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엔에이치 개인 주주로서 입장을 표명한 것이기도 하다. 윤 대표는 “무리한 이사 선임은 회

사와 일반 주주의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콜마홀딩스 측은 ‘이승화 전(前)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자질 논란에 대해 모든 대응은 법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개최된 콜마비엔에이치 이사회에서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주주 제안으로 상정한 ‘콜마비엔에이치 임시 주주총회 소집 안건’이 부결됐다. 윤동한 회장은 사내·사외이사 5인 선임의 건을 올릴 계획이었으나 무산된 것이다. 또 콜마비엔에이치 이사회에서 안건이 부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콜마비엔에이치 관계자는 “출석 이사 6명 중 3명이 찬성하고 3명이 기권한 결과”라며 “경영권 분쟁이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도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사회가 윤동한·윤여원 부녀측과 윤상현 부회장 측으로 나뉘는 등 창업주 일가의 경영권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향후 이승화 전(前) CJ제일제당 부사장 등의 이사회 진입은 경영 안정성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관계자는 “콜마비엔에이치는 특정 세력의 이해가 아닌 모든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장보기 무섭다”… 먹거리 소비 9년만에 최저

2분기 월평균 소비지출 42만3000원
물가 상승분 제외 소비지출 34만원

먹거리 소비가 2016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까지 위축됐다. 외식·가공식품 등의 소비지출이 크게 오른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1일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가구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지출(명목 기준)은 월평균 42만3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8%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소비지출은 34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되레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먹거리 실질 지출액은 동일 기준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9년 이후 최저다. 그 이전까지 기간을 늘려 비교할 시 2016년 2분기(33만 원) 이후 9년 사이 가장 작은 규모다.

올해 2분기 지출액 자체가 늘어났음에도 물가 상승분을 빼면 실제 소비 규모는 줄었다는 얘기다. 2분기 식료품·음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9%에 달했다.

가구의 먹거리 실질지출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2023년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으로 줄었다가 작년 4분기에 1.8% 늘며 반등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증가율이 0.4%로 둔화한 뒤 2분기에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지난해 4분기 치솟은 원·달러 환율이 수입 원자재 등에 반영되면서 식품 기업들이 제품 출고가를 줄줄이 인상했다. 이는 소비 위축을 불러온 주 원인으로 꼽힌다.

식료품·비주류음료는 전체 소비지출의 14%를 차지한다. 필수 지출인 만큼 소비량을 크게 줄이는 대신 더 싼 대체품을 소비했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분석이다.

한편, 음식점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 식료품 소비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2분기에는 외식비 지출 역사 소폭 증가에 그쳤다.

2분기 가구 식사비 실질지출은 35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0.2% 늘었다. 1분기에 0.4% 줄어든 뒤 다시 늘어났지만 아직까진 둔화 추이가 유지되는 모양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1일 서울 소재 유통매장에서 고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청년미래적금’ 출시… 6~12% 추가 기여

李정부 ‘청년 금융정책’

청년미래적금 ‘일반형·우대형’ 운영
근속 인센티브 등 자산형성 지원 방침

이재명 정부의 청년 금융정책 세부 내용이 공개돼 이목이 집중된다. 우선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다. 또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지원하는 ‘근속 인센티브’도 신설된다. 여기에 지난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도 상시 운영으로 전환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3일 국회에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한다. 공개된 예산안은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6~12%를 추가 기여하는 ‘청년미래적금’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근속 인센티브’ ▲무주택 저소득 청년 월세지원 등 다양한 청년 정책 예산을 포함했다.

◆청년미래적금, 최대 2200만원 목돈 마련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 원을 3년간 납입하면 최대 2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내년부터 가입이 불가한 ‘청년도약계좌’를 대신해 출시된다. 가입 대상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의 청년(19~34세)으로, 납입액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일반형은 가입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 기본금리에 더해 납입액의 6%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매달 50만원씩 납입할 경우 만기 시 약 2080만 원을 받게 된다. 기존 금융권 상품과 비교하면 연 12%의 적금 상품과 비슷한 수준이다.

‘우대형’은 지난 2023년까지 운영됐던 ‘내일채움공제’와 유사하게 운영된다. 중소기업에 신규 입사한 청년이 입사 6개월 내 가입하면 은행 이자에 더해 12%의 정부지원금을 제공하지만, 3년의 근속 기간을 약정해야 한다. 월 50만 원을 완납할 경우 만기 시 22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금융권 상품과 비교해 연 16.9% 적금 상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내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된다. 청년미래적금과 중복가입도 불가하지만,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상품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청년도약계좌를 보유한 청년은 상품 전환 시 재가입이 불가한 만큼, 상품 특성을 고려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이 높을수록 정부지원금이 줄어드는 청년도약계좌와 달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한 지

원금을 제공한다. 소득 구간이 연 3600~6000만원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청년미래적금이 유리하다. 납입액 대비 지원금 비중은 청년미래적금이 더 크지만, 가입 기간이 각각 3년과 5년으로 차이가 있는 만큼 만기 시 총 이자액은 청년도약계좌가 더 많다.

◆비수도권 中소 재직 보조금

‘근속인센티브’는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2년에 걸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19~34세 청년이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속 시 2년에 걸쳐 480만 원을 지급하며,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에는 120만 원을, 특별지원지역은 240만 원을 추가 지원해 2년간 최대 7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저소득청년 주거비 지원사업도 내년부터 상시화한다.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고,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청년이라면 2년간 월 20만원의 주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선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확정에 앞서 지난달 26일 개최된 ‘2026년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아동·청년·어르신 등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저출생을 반등시키고 고령화에도 대처하겠다”고 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나승진 기자 asj1231@

5대 은행, 기업대출 중심 수익성 확보 나서

안정적인 대기업 중심 대출 확대
개인사업자 마중물 공급 필요 지적도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은행들이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대출을 늘리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대출이 안정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신용평가 범위를 확대해 개인사업자에도 기업대출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8월 기준 836조8801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6조2648억원 증가했다.

기업대출은 6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던 시기 8조4211억원 감소했다. 이후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하자 기업 대출로 수익화 하려는 은행이 몰리며 7월(8769억원)과 8월(6조2648억원)에는 다시 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업대출 잔액은 167억9179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2조9885억원 증가했다. 7월 한달간 7222억원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3배 가량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668조9622억원으로 같은 기간 3조2762억원 늘었다. 7월 중소기업대출은 1조5991억원 늘었다. 2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개인사업 대출을 의미하는 소호대출잔액은 325조1757억원으로 4226억원 늘었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출은 한 달 전 증가 폭(6644억원)과 비교해 2000억원 줄었다.

전체를 분석해보면 기업대출 중 대기업대출은 20%,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대출은 64%, 개인사업자 대출은 16%인 셈이다. 은행들이 부실 리스크가 큰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대출을 줄였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안정권에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의 대출을 확대하기보다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성장가능성에 따라 적절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출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말 은행권 기업대출 연체율은 대기업이 0.14%로 가장 낮고, 개인사업자 0.66%, 중소기업인 0.79%로 가장 높다. 신용평가 시스템에 다양한 평가제도를 덧입혀 개인사업자대출 범위도 확대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 대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신용도가 기준에 못미치는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에게도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